

李 “부동산정책 0.1%도 허점 없어야”… 다주택자 배제 지시

정책과정 다주택·고가주택자 제외
신뢰도 강화·개혁 의지 재차 강조
5월 양도세 중과 전 추가대책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를 향해 확고한 부동산 개혁 의지를 보여주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시스

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

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 보유자의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책 설계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들이 참여해 정책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과거 문재인 정부 ‘LH 사태’처럼 정부 신뢰도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는 자율적으로 보유주택을 매각하도록 권고해

왔다. 국민에게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공직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만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나 농지 투기 의혹 등이 문제로 제기되며, 고강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지침은 각 부처에 전달된 상황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후 업무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는 게 더 유리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 상황에서 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지선·개혁 동시투표 추진… 국민의힘 협조 여부 ‘관건’

개혁안, 계엄 통제 강화 등 골자
국힘 개혁 공감, 동시 투표 반대

6·3 지방선거와 개혁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개혁을 논의 중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오는 30일 개혁추진을 위한 2차 연석회의를 연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의실에서 이들 정당들의 원내대표를 초청해 개혁 논의를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정당은 지선과 개혁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데 찬성했다.

개혁 논의는 우 의장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 정신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단계적·점진적 개혁을 준비하자고 힘을 실으며 논의가 가속화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혁 논의는 여러 번 있었지만 늘 실패했다. 2018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국민투표법 미비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6공화국 헌법은 애초에 개정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면서 “그간 헌법을 뜯어고쳐 독재를 했던 역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이 때문에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등 진영과 관계 없이 합의된 것을 토대로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권한 등을 쟁점이 많은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개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우선 민주당은 지선과 동시에 개혁 국민투표를 하려면 내달 5월11일까지 개혁안의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헌법 개정안은 내달 7일까지 발의해야 한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인 셈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직 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재석 의원 295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원회의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뉴스시스

명 기준으로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1석)과 범여군소 정당 전체(18석), 개혁신당(3석), 무소속(5석·구속된 강선우 의원 제외)까지 포함해도 187석이다. 국민의힘(107석)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선 동시 국민투표’는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과 범여권 정당들이 추진하는 개혁은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졸속 개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이 정치권 전반이 수용할 수 있는 선언적 내용 중심이므

로 국민의힘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당내에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개혁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했고,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당론으로 (개혁안을) 반대하는 것이 당에 어떤 이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우 의장과 민주당 등은 우선 개혁추진 2차 연석회의까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대전 화재현장 찾은 與 “철저히 조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가 22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및 사고 수습 현황을 점검했다.

김주영 민주당 산재 예방 TF 단장은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으로부터 재해 현황,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박해철 TF 간사, 김태선·이우용·김윤 위원, 박정현 의원이 동행했다.

이들은 현장 방문 이후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주영 단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사고 양상은 참담하다”며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복층 구조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견됐다는 점은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사각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발화 원인뿐 아니라 해당 공장의 불법 건축물 여부, 소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평상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터로 출근했던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안전 관리 시스템에 구멍은 없었는지 향후 사고 원인 조사가 철저하고 명명백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쟁기겠다”며 “남겨진 유가족분들과 피해 노동자분들이 또 다른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합당한 보상과 치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장동혁, 대구 공천 잡음에 “모두 제 책임”

대구 찾아 “공정한 경선 위해 최선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당내 잡음이 커지자 “모든 것이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공천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대구 의원들을 만나 대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심을 듣고 청취하겠다”며 “그 민심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연석회의에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6선)·윤재욱

(4선)·추경호(3선) 의원을 비롯해 초선인 유영하·최은석 의원을 비롯한 대구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말씀을 정리하면 대구시장 공천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을 믿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과정에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다”며 “공관위원장과 소통해서 여러 상황

들이 빨리 종료되고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대표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을 두고는 “공정한 경선 방식”이라며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도 하지만, 경선에 참여했던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